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대립과 반기독권의 정치를 중심으로

정구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I. 서 언
- II.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 III. 대립과 반기독권의 트럼프 리더십
- IV. 결 언

〈요 약〉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00일을 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국정운영방식과 정책결정가들 가운데 경쟁과 대립으로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행동계획은 분열된 미국 유권자들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대중영합주의적 대선공약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6대 국정기조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창출, 무역협정 재협상, 에너지 정책 등 대내적 선거공약은 출범 직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보여준 트럼프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지자들을 위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미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미국우선주의의 접근법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외정책의 경우 트럼프가 제시한 트럼프 독트린, 즉 힘을 통한 평화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북핵문제의 경우 북한의 핵능력 및 투발수단의 고도화에 따라 고립주의에 가까운 현실주의적 대외인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조차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물리적으로 이들의 고도화 과정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의 고위직 임명과 국가안보회의 내부의 혼란, 그리고 행정명령 등에 대한 대내적 저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정책결정가들사이의 이념적 경쟁과 이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1. 서 언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이후 채 100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행동계획(100-day action plan)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유권자와의 계약(Trump's Contract with the American Voter)>¹⁾은 분열된 미국 유권자들을 포용하고 통합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대중영합주의적 대선 공약을 재확인 하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6개의 국정 우선순위²⁾에는 미국 국방력 강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 집행 등도 포함되어 대외정책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임을

1)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의 제 45대 대통령 선거 홈페이지 게재 (https://assets.donaldjtrump.com/_landings/contract/O-TRU-102316-Contractv02.pdf).

2)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기조 6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 2)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3)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4) 미국 국방력 강화(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5) 법집행 강화(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6)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ns)이 이에 해당된다.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america-first-energy>).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반면 무역협정 재협상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에너지 정책 이행 등의 대내적 우선순위들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고 있는데, 예컨대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천명, 중동지역 테러위험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보여준 트럼프 자신의 국정철학이 대통령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지지자들을 위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도전의 실체에 대한 고립주의에 가까운 현실주의적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적이며 대중영합적인 접근법을 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행정부 내부의 정치적 대립도 불거지는 상황에 놓였다.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 3주 만에 사임하며 현 육군중장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로 급히 대체되기에 이르렀으며,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의회 인준 및 실무진들의 임명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안보분야 주요 고위직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라 대내외적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반기독권(anti-establishment)을 표방하는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이 국가안보회의 각료급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Principals Committee)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 국가안보회의 재조직과 관련한 행정명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미 대선개입 의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동력을 이미 상실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기밀사항들이 상시적으로 유출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적 신뢰도와 평판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지난 2016년 선거 기간 동안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하는 트럼프 독트린³⁾이 어떠한 우선 순위와 방향의 대외정책으로 이행될 것인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특히 트럼프의 역외균형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자원이 집중될 아시아 지역, 특히 미국의 강화된 해양전력과 전략자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될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지형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에게 가장 우선적인 외교안보 현안인 북한문제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속에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의 시급성과 북한 정권의 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비핵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금보다는 좀 더 공세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과

3) Peter Navarro,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31, 2016); D. Quinn Mills, and Peter Navarro, “Trump’s Return to Reagan,” *The National Interests* (October 11, 2016); Alexander Gre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이것이 전개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논한다.

II.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북한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 역시 2016년 선거기간에서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억지,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이라는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에 관한 선택지를 좁혀 비핵화라는 최종단계(end state)에 이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⁴⁾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물론 지난 2013년 이란에 대한 미국의 비동적전(non-kinetic warfare) 차원에서의 스텝스넷(Stuxnet) 공격 성공은 이란 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진행을 늦추는 사이버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risk)의 군사적 수단이었고,⁵⁾ 이에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을 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 다시 말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핵무기 생산과 성능개선의 과정을 막을 수는 없기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핵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4) Sung Kim, Testimony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Washington D.C. January 13, 2015).

5) Robert J. Reardon, *Containing Iran: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Iranian Nuclear Challeng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2), p. 131.

6) 연합뉴스 (2015. 5. 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30/0200000000AKR201505300215000009.HTML>)

주변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명백한 레드라인은 북한의 핵무기 수출이나 핵무기 사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인내의 차원에 북핵문제에 대한 명백한 레드라인은 밝히지 않아왔는데, 그 레드라인을 정밀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위 ‘전략적 인내’ 접근법은 위험회피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한편 2016년 대선과정에서 북핵문제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에 놓여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북핵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 역시 지극히 단편적이었으며 때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⁷⁾ 우선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인식은 ‘mad man’ 혹은 ‘maniac’으로 표현되었으며,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대화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레토릭 가운데에서

7) 지난 2016년 1월 10일 NBC <Meet the Press> 인터뷰를 통해 “핵문제는 모두의 문제이지만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일본과 한국의 문제 (Nukes are everybody’s problem, right? and frankly, it is a Japanese problem and it’s a South Korea problem)”라고 발언하기도 했음.

8) Donald Trump, The 4th Republican Debate (November 10, 2016).

공통적으로 식별되는 접근법은 바로 중국역할론이었다. 즉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야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압력을 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란은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 중 하나로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이란 비핵화 협상과정에 북한 문제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⁹⁾ 실제로 이란과 북한은 오랜 시간 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을 지속해왔으나, 핵개발에 관련한 협력은 부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비핵화 협상과정에 북핵문제를 다뤄야한다는 트럼프의 의견은 중국역할론에서와 같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역외균형전략적 차원의 입장이거나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북핵문제 해법이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행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의회, 정부, 백악관 등 주요 외교안보정책결정기구들 사이에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 현안이기도 한 것이다. 우선 미국 내에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였으며, 상당히 위험회피적 전략이었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또한 지금의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고려해볼 때 평화로운 비핵화, 즉 외교적 해법을 통한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북 간 대화를 시작으로 핵동결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9) Donald Trump, The First Presidential Debate (September 27, 2016).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의 소위 ‘호전적인’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지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레토릭이라 생각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첫 번째 청문회가 북한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은 선제타격론이나 정권붕괴론과는 거리가 있다.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이 언급한 대북 선제공격은 그만큼 의회내부에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좌절에 기인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된 대북 선제타격론은 대북정책의 모든 수단을 다시 고려해보자는 의미이며, 군사적 접근법으로의 선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최근 임명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 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부 장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대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군사적 강압에 의한 접근법보다는 강화된 대북 경제제재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에드 로이스(Ed Royce)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대북접근법은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의 기초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그 대북접근 방법론에 이어서 물리적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비동적전 수단과 같은 다양한 공세적인 수단이 사용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인다.

10) Sung Kim, Testimony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Washington D.C. January 13, 2015).

Ⅲ. 대립과 반기독권의 트럼프 리더십

한편 출범 100일을 채 맞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와 같은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많은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과 외교안보 분야 정책결정가들 사이의 상이한 이념적 배경과 이에 따른 정책적 경쟁, 그리고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이 포함된 국가안보회의의 운영과정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보인 바 있다. 즉 미디어 인터뷰나 공식적인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상대국 혹은 적국에 대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¹¹⁾ 이에 따라 국가안보 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같은 공식문건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국의 구체적인 대외정책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더불어 소위 전술적 거래주의(tactical transactionalism)에 따른 대외정책 운영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정책결정가들 사이의 이념적 분포와 연합, 그리고 이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도 또 하나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로 인해 이제까지 트럼프 대외정책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가들은 주로 미국우선주의자(American Firsters), 종교적 전사(Religious warriors), 그리고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로 유형화된

11) Donald Trump, The White House Press Interview (February 17, 2016).

다고 분석되어왔다.¹²⁾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주장은 바로 트럼프의 이념체제와 일치한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의 주장은 미국의 동맹체제는 불평등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역시 불공평하다는 점, 그리고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동경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들의 의견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및 경제적 관여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미국우선주의자들로 유형화 될 수 있는 정책결정가들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종교적 전사 유형의 정책결정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했는데, 대표적 인물이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폴린이다. 공화당에서도 소수의 입지를 차지하는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부상보다는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이 시급한 안보현안이라 상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에 과도한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트럼프 자신은 고립주의에 가까운 미국 우선주의자로서 중동에서의 무모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공화당 그 어떤 인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여 마이클 폴린과 같은 유형의 정책결정가 유형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대외 정책기조를 내세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우선주의자들이나 종교적 전사들 유형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에 실질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물들은 소위 전통주의자들이며, 이들은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공화당 대외정책 주류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미트 롬니

12) Thomas Wright, "Trump's team of rivals, riven by distrust," Foreign Policy (December 14, 2016).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동맹 공약을 중시하며, 미국의 경제, 안보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 테러리스트와의 불필요한 지상전을 원치 않으며,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선호한다.

요컨대 이들 간의 경쟁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의 여부가 트럼프가 대외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안보회의 운영매뉴얼 변화와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국가안보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며,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의장과 함께 반기독권을 표방하는 인물의 국가안보회의 내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서로 다른 대외정책이념을 가진 정책결정자들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기조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혼란스러운 국정운영방식(chaotic style)에 따라 이들 간의 경쟁구도를 선호하며 과거에도 이와 같은 경쟁구도 속에서 수시로 인적교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V. 결 언


지난 2월 미·일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미·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으로서의 북핵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게 하였으며, 미·일동맹의 공약이 준수되어야한다는 점을 트럼프로 하여금 스스로 언급하게 하였다. 뒤이은 김정남 피살사건은 이러한 국면

전환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북한에 대한 테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다시금 제기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미국 의회내부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의 톤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소위 전통주의자와 미국우선주의자들의 요구가 동시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균형(balancing)과 책임전가(buckpassing)의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 역외균형전략적인¹³⁾ 트럼프의 대한반도 접근법 속에는 이미 미국 내 정책결정가들의 경쟁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공약의 중요성과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주류 공화당 대외정책 엘리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 방위분담금 재협상과 같은 사안은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요구들 간의 균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국가안보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균형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동할지의 여부 역시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 한국은 이러한 정책결정가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대북접근법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정책결정가들의 경쟁은 거시적으로 중동과 아시아, 유럽 등 권역별로 미국의 자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다름을

13) Glenn H. Snyder, "Mearsheimer's World—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2002), p. 164.

가정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에 속한 한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대북정책과 동북아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와 향후 한반도 접근법의 측면에서 한국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Gre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 Kim, Sung, Testimony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Washington D.C. (January 13, 2015).
- Mills, D. Quinn, and Peter Navarro. “Trump’s Return to Reagan,” *The National Interests* (October 11, 2016).
- Navarro, Peter,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31, 2016).
- Reardon, Robert J., *Containing Iran: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Iranian Nuclear Challeng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2).
- Snyder, Glenn H., “Mearsheimer’s World-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2002).
- Wright, Thomas, “Trump’s team of rivals, riven by distrust,” *Foreign Policy* (December 14, 20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홈페이지 www.donaldjtrump.com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www.thewhitehouse.gov

연합뉴스 www.yonhapnews.com